

[ 종합 ]

### 임대아파트 부도나도 보증금 전액 받는다

공공 임대아파트 사업자 부도로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해 있는 시민들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8일 건설교통부와 열린우리당이 따르면 부도난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이 임차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특별법안'(대안)이 최근 건설교통위원회와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와 전체회의 통과판 낭기되고 있다.

이 특별법은 부도난 공공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원할 경우

#### '임차인보호법안' 통과 6만7천여명 혜택 전망

주택공사 등이 해당 아파트를 매입해야 하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도록 돼 있다.

특별법은 주택공사가 부도아파트를 매입하도록 한 외에 주권이 아파트를 국민임대주택으로 바꿔 다시 공급할 때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입주권을 주도록 하고 있다. 특별법은 작년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공건설임대주택중 시행일 이전에 부도가 났거나 사업자가 1년 이상 국민주택기금의 이자를 납부하지 못한 준부도 아파트에도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부도아파트 임차인 4만 9천명, 준부도 아파트 임차인 1만 8천명 등 총 6만 7천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은 "공공 임대아파트 사업자가 부도나면 보증금까지 날려야 했던 시민들의 고통이 해결될 수 있게 됐다"면서 "연내 법사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할 계획에 내년 4-5월께는 발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광주 수완·신창지구 영향

#### 아파트 공급 10.6% 증가

올들어 전국 아파트 공급 물량이 지난해에 비해 감소했지만 광주는 수완지구와 신창지구의 영향으로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프드뱅크가 올들어 11월 말까지 분양된 아파트 물량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519개 사업장에서 2만 1807가구가 공급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3만 3천 716가구에 비해 6.1%가 줄어든 것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 분양물량은 30.4%인 7만 3천 357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7% 감소해 수도권 집값 불안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광주지역은 수완지구(1만 543가구)와 신창지구(3천 488가구)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10.6% 늘어난 2만 3천 321가구가 분양돼 경기(13.7%)에 이어 두번째로 물량 증가율이 높았다.

전남은 목포 남양신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공급이 늘었으나 전체적으로는 분양물량이 지난해와 비슷한 7천 334가구에 그쳤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인턴보좌관제' 예산처리 유보

## 시민단체 등 반발로... 시의회 14일·도의회 11일 결정

유급 인턴보좌제 도입을 위한 예산 처리를 강행하려던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계획이 시민단체의 저지와 자치단체의 부정적 반응에 따라 일단 유보됐다.

광주시의회 강박원 의장은 8일 오후 본회의에서 "유급 인턴보좌관제 관련 예산 1억 7천 640여만원을 포함한 2조 3천 277억여원의 광주 시 내년도 예산 처리를 유보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오는 14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인턴보좌관제 예산 처리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광주 경실련과 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 30여명은 이날 오후 1시 40분부터 시의회 4층 본회의장 입구에서 유급 인턴보좌관제 도입 반대를 주장하며 시의원들의 입장을 몸으로 막았다. 이에 따라 오

후 2시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가 1시간 가량 지연됐다.

시민단체가 특정 사안에 반대하며 물리력을 동원해 시의회 본회의를 저지한 것은 광주 시의회 사상 초유의 일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집행부가 반영하지 않은 예산을 시의회가 새롭게 편성해 유급 인턴보좌관제를 도입하려는 꼴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일부 시의원들은 "유급 인턴보좌관제는 의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시민단체가 물리력까지 동원해 본회의의 개의를 막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예결특위는 지난 4일 내년부터 유급 인턴보좌관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1억 7천 640여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범근)도 8일 오전 예결위원 간담회를 가진 뒤 인턴보좌관제 시행을 위한 예산 5억 4천 여만원을 포함 3조 9천여억원 규모의 내년도 전남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오는 11일로 미루기로 했다.

도의회는 인턴보좌관제 예산 증액에 대해 전남도가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 투자유치를 위해 미국을 순방 중인 박준영 전남지사와 김종철 도의회의장이 귀국하는 10일 이후로 유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예결위는 이에 앞서 지난 7일 인턴보좌관제 예산 5억 4천여만원을 의원 발의 형태의 수정 예산으로 집행부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 관계자 30여명은 8일 오후 광주시의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유급 인턴보좌관제 도입 반대' 등의 주장을 담은 피켓을 들고 시의원들의 입장을 막고 있다. /유익희기자 jrwi@kwangju.co.kr

# 與 통합신당과 세몰이 박차

## 희망 21·실사구시·안개모 13일 신당 창당 로드맵 논의

김근태 의장의 사퇴론과 일부 의원들의 선도 탈당론이 확산되며 분당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의 통합신당과 세몰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일 열린우리당 의원 모임인 희망 21, 실사구시, 안개모(안정적 개혁을 위한 모임) 대표들은 여의도에서 오찬 모임을 갖고 '통합신당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신당의 정체성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또한, 3개 의원 모임 대표들은 오는 13일 소속 의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통합신당의 정체성과 시대정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다.

3개 모임 소속 의원들이 모두 모이면 무려 60여 명에 이른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는 통합신당과 의원들이 본격적인 실행행사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희망 21 대표를 맡고 있는 양형일 의원(광주 동구)은 "오늘 회동에서 3개 의원 모임 대표들은 통합신당의 정체성을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며 "특히 오는 13일에는 소속 의원들이 모두 모여 통합신당의 정체성과 신당 창당의 로드맵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동에는 희망 21에서 양형일, 최규성 의원이 참여했으며 실사구시에서는 강봉균, 변재일 의원이, 안개모에서는 박상돈, 김성근 의원 등이 참여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여수산단 진입도로 시공업체 확정

### 9천억 투입 2011년 완공

여수산업단지과 광양산업단지를 직통으로 연결하는 사업비 9천억원대의 여수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이하 여수산단 진입도로 공사) 시공업체가 8일 확정됐다.

전남도는 8일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기

술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 여수산단진입로 개설공사 입찰에 참가한 8개 건설사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입찰가격과 수행능력 평가서(PQ), 기술력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1공구 GS컨소시엄, 2공구 금호 컨소시엄, 3공구 대림 컨소시엄, 4공구 포스코 컨소시엄이 각각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구별 예정금액은 1공구 1천 776억원, 2

공구 670억원, 3공구 4천 592억원, 4공구 1천 115억원이며 총 사업비는 8천 800억원에 이른다.

여수산단 진입로 공사는 여수시 월내동에서 광양시 금호동에 이르는 8.5km 구간으로 국내 최대규모인 5.3km 길이의 해상 교량을 포함하고 있다.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10월 개착공, 2011년 완공될 예정이며 공사가 완료되면 여수산단과 광양산단간 거리가 60km에서 10km 이내로 단축되고, 소요시간도 80분에서 10분대로 줄어들게 된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 창녕 갔던 김용갑, 광주는 안간다

### "당에 부담" 지도부 광주행에 불참 '해방구 발언' 사과 진정성 의심

지난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광주 해방구'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경남 밀양·창녕)이 해피한 논리를 내세워 강제성 대표 등 당 지도부의 주말 광주 봉사활동에 동행하지 않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8일 김용갑 의원은 "후남에 더 다가가기 위한 강제성 대표의 광주 봉사활동에 대한 진정성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사과의 뜻으로 광주 봉사활동에 참여한다면 오히려 당 지도부에 부담을 주는 등 진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불참 의사를 나타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지난 주말 자신의 지역구에서 펼쳐진 당 지도부의 봉사활동에는 참여했다는 점에서 광주 봉사활동 불참 결정은 아직도 '광주 해방구 발언'에 대해 진솔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광주 방문을 통해 몸으로라도 진정성 사과의 모습을 보여야 할 김 의원이 '당 지도부의 진정성 훼손'이라는 해피한 논리로 광주 봉사활동에 불참한 것은 한나라당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강제성 대표와 황우여 사무총장, 박재완 비서실장, 나경원 대변인 등은 오는 9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광주에서 사랑의 식당 배식활동 및 연탄배달 등의 봉사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시 설

### 교육감 직선제, 보완 필요하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게 됐다.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 특별상임위원회로 전환된다. 현재의 간접선거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만큼 직선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지금까지 초·중·고교 교사와 학부모, 지역인사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해왔다.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는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에 어긋나고 진정한 교육자치도 실현하기 어려웠다.

시행과정의 부작용도 적지 않다. 선거가 지연과 학연 등에 휘둘러 왔고 초 등교 중등 등 학백에 따른 교단의 갈등도 심각했다. 또 결선투표를 도입, 1차 투표 결과에 따라 후보자간 담합 등 비리의 개연성이 컸다. 시·도 교육위원회

와 시·도 의회의 심의·의결과정이 중복되고 행정감사가 이중으로 이뤄지는 등 행정력도 낭비돼왔다.

직선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불발선거운동을 차단할 수 있고 의결기구의 일원화로 행정력 낭비와 소모적 갈등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교육에 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시·도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것도 용이해지게 됐다.

문제는 교육의 독립성 확보다. 선거가 과열되면 정치색을 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독립적으로 운영돼온 시·도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편입돼 교육의 정치 예측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정규모에 따른 지역간 교육격차도 우려된다. 정부는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보완해 교육자치의 근본의미를 살려야 할 것이다.

### 공무원 범죄 엄한 법 집행으로 근절해야

지난해 공무원 범죄 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교육인적자원부,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직원이 많은 정부 기관은 경찰청, 노동부, 법무부 순으로 각각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과 법 집행 관련 공무원들의 범죄가 많다는 사실은 우리 공직사회의 도덕 불감증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대검찰청의 지난해 공무원 범죄 유형 분석 결과를 보면 국가 공무원 범죄자는 무려 1만 4천 791명에 이르렀다. 그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공무원이 3천 66명, 그리고 직권남용, 뇌물 등 직무와 관련된 범죄자는 경찰청이 194명으로 단연 많았다. 지방공무원의 범죄자도 4천 803명에 달했다.

얼마 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지난해 '한국의 반부패 시스템 실태보고'

에서도 공공부문의 부패가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에서도 특히 법 집행의 문제점이 지적됐는데, 공무원 범죄 기소율이 해가 갈수록 낮아져 36%에 불과했다. 이는 3년 전보다 무려 20%포인트나 낮은 것이다.

공무원 범죄가 낳는 사회적 파장은 일반인에 비해 크다. 공무원 범죄는 국가 신인도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2세 교육을 담당하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범죄는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어 더욱 그렇다.

공직사회의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비리가 드러나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무와 관련된 범죄자는 경찰청이 194명으로 단연 많았다. 지방공무원의 범죄자도 4천 803명에 달했다.

## "쌀 개방 예외 아니다.. 곧 논의할 것"

### 한미 FTA 커틀러 美 수석대표

앤디 커틀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미국측 수석대표는 "쌀에 대한 논의도 어느 시점에서는 개시될 것"이라면서 쌀을 개방 예외 품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5차 협상이 한국 시각으로 9일 종료되는 등 한미 FTA 협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지만 우리의 최대 민감 품목인 쌀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크게 벌어져 있는 셈이다. 커틀러 수석대표는 7일(현지시간) 협상단 숙소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측이 쌀

의 FTA 적용 예외를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나는 반대로 FTA에서 개방 예외는 없고 완전한 개방을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그는 "내년초까지는 협상이 타결되기를 희망하고 이를 위해 며칠내 또는 몇 주내에 주요 쟁점에서 진전을 이룰 필요가 있다"면서 "의약품과 자동차 등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오는 1월 중순으로 예정된 6차 협상에 이어 추가 협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스카이=연합뉴스

### 한-뉴질랜드 '동반자관계 공동선언' 채택

#### 내년 상반기 FTA 타당성 조사

뉴질랜드를 국민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웰렌 클라크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정치·경제·환경 등 제반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21세기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양국은 이에 따라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민간 연구기관 공동연구를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에 따라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민간 연구기관 공동연구를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 연구결과로서 양국의

FTA가 한국 농민들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뉴질랜드가 한국시장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또 외교장관간 상호 교환방문을 연례화하고 국회의원간 정례 교류를 추진하는 등 정부·의회간 협의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유엔개혁과 군축·비확산, 인권 분야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오는 11일부터 필리핀 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가 태풍으로 연기됨에 따라 당초 예정했던 해외순방일정을 단축, 오는 10일 조기귀국하기로 했다. /웰렌=연합뉴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7기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3
사회 1부 2200-618	사건부 2200-690	사업 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안보는게 백번 낫다